北 로켓발사 초읽기

연료 주입 3~4일…주말에 쏠 수도

로켓 장착 예정보다 나흘 빨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예정보다 나흘 앞서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확인돼 발사일을 앞당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되면 실제 발사까지 연료주입 과정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발사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사일 빨라지나=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는 3~4일이 소요된다. 실제 북한은 2006년 7월5일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에도 3~4일 전에 연료주입 작업을 마쳤다.

북한이 지금 로켓에 연료주입 작업을 시작한다면 기술적으로 28~29일 사이 충분히 발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언론은 다음달 4~8일로 예고된 발사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일정을 지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로켓이 발사된 이후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공위성이란 주장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사 예고일을 준수할 것이란 관측이다.

◇발사 후 30분이면 실체확인=북한의 로켓이 발사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거리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발사대에 있는 로켓의 상단부분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한·미 첩보당국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는 인공위성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는

미국의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에서 지구궤도상의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진입하면 NORAD에서 최종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ORAD는 로켓의 발사 여부를 60초 이내에 탐지할 수 있으며 발사체의 궤도 방향 등을 분석해 30분 이내에 탄도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인지를 확인하고 요격 여부를 상층부에 보고할 수 있다고 한다.

◇로켓 비행거리도 관심=북한이 발사할 로켓의 비행거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로켓 낙하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까지 날아간다면 인공위성 궤도 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장거리 로켓 개발 수준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험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동해상과 태평양 해상의 좌표를 거리로 환산하면 발사장으로부터 각각 650여km, 3천600여km 떨어진 곳이다.

북한이 제시한 위험지역은 미드웨이제도 서쪽 북태평양 인근으로 하와이에서 1천km 떨어진 곳이다. 사거리를 좀 더 연장한다면 하와이 제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로켓의 비행거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대왕함 출동준비 완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함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이 26일 동해상으로 급파됐다. 우리 군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은 SPY-ID(V)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 1천km의 육상·해상·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대응 어떻게

韓 대응TF 가동
美 도발행동 경고
日 로켓 요격명령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함에 따라 정부의 외교안보부처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부는 26일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재로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의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된 것으로 확인되자 이날부터 위기조치반 격인 대응TF를 가동했으며 합동참모본부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응TF는 미군 측과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첩보위성 등 한.미 연합감시자산이 수집한 북한의 로켓 발사작업 동향을 자세히 분석, 관련 부처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이같은 도발적인 행동이 간과되지 않을 것이며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관련,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의한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전했다. /연합뉴스

■北 로켓발사 자신감 배경은

北 기술 지원받은 이란 위성 발사 성공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하는 등 발사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란과의 기술협력 커넥션 의혹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술협력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이란에서 발사한 위성 발사체가 성공했다"며 "(북한도)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도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 부품을 이란 등 중동 몇 개국에 판매하고 시리아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2일 "이란이 자체 개발했다는 로켓 '사피르 2호'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8월 이란은 모의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그 원인 분석을 북한에 의뢰해 이를 개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가 이란의 위성 발사 준비단계에서부터 깊이 관여해 왔고 북한은 이란 측으로부터 발사 성공과 관련한 데이터를 받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예멘, 한국인테러 용의자 6명 검거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테러사건의 용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예멘 내무부는 지난 15일 시밤유적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대상 자살폭탄테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용의자 12명 중 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멘 내무부는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수배 용의자 중 알-카에다 소속 6명을 체포했다"며 "이들은 (한국인 관광객 테러사건 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및 석유시설 등을 타깃으로 10건의 또 다른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